

“세계개편 어떻게, 통합청사 어디로” 광주 첫 시민 공청회

“통합시 산하 기초자치체 재정 안정 필수”

“통합청사는 논의 후순위… 교육 자치 보장”

광주·전남 시도 행정통합을 앞두고 광주지역 첫 대시민 공청회가 열렸다. 시민들은 대체로 통합에 찬성하면서 세계개편, 통합청사 소재지, 교육자치 확보 등 세부적인 내용에 대한 제언에 나섰다.

광주시와 광주 동구, 광주시교육청 등은 19일 광주 동구청 대회의실에서 광주·전남 통합 시민 공청회를 열었다.

공청회는 시도통합과 관련한 의구심 해소 차원에서 권역별로 개최되고 있다. 광주지역에서 열린 관련 시민 공청회는 이번이 처음이다. 광주지역 첫 공청회에는 강기정 광주시장과 임택 광주 동구청장, 더불어민주당 정준호 국회의원, 이정선 광주시교육감을 비롯해 주민과 행정기관 관계자 등 500여 명이 모였다.

강 시장이 앞선 17일 동안의 시도통합 추진 경과를 설명한 것을 시작으로, 이후 시민들의 관련 질문이 이어졌다.

시민들은 시도통합에 앞서 현재 기초자치단체의 재정 안정을 위한 세계개편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한편, 완전한 교육 자치의 실현을 촉구하거나 통합 청사의 위치 등 제언에 나섰다.

한 시민은 통합에 앞서 통합시가 교부받을 총 20조 규모의 교부금 배분을 비롯해 기초자치단체가 운영해나가는 재원 중 하나인 보통교부세의 증가분을 특별법에 반드시 명시하는 등 세계개편 과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A씨는 “특별법에는 가장 광주·전남 특별시로 교부될 재원 중 일정 비율을 산하 기초자치단체로 별도로 배분하는 내용이 반드시 들어가야 한다”며 “특히 보통교부세의 경우 이를 강제적으로 배분하는 조항이 들어가야만 시군구가 보조금을 토대로 안정적인 운영에 나설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교원단체 소속 한 시민은 헌법에 담긴 교육 자치가 특별법에서 배제되는 것이 아닌지 우려하는가 하면, 수험생을 둔 학부모는 통합 이후 광주시도 농어촌특별전형에 포함되는 것인지를 묻기도 했다.

시민 B씨는 “시도통합 특별법은 헌법 제31조에 명시된 교육의 자치를 존중하지 않고 있다. 아이들에게 교육이 어떻게 변할지 전혀 설명하지 못하는 만큼 교육자치는 반드시 분리돼야 한다”며 “교육은 교육감의 책임 아래 안정적으로 운영돼야 한다. 아이들의



광주·전남시도행정통합대시민공청회일정이시작된19일오후광주동구청대회의실에서광주지역첫시민공청회가열리고있다. /뉴스1

교육은 실현 대상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시민 C씨는 “전남 일원에 적용 중인 수험생들의 농어촌 특별 전형 선발을 광주에도 맞추는 것인지 구체적인 것이 없다. 공무원 준비 등 일련의 시험 응시 과정에서도 모두 적용될 텐데 미리 파악할 수 없어 답답하다”고 토로했다.

이 밖에 통합청사의 위치를 제언한 한 시민은 “원상복구를 앞둔 옛전남도청 한 칸에 통합시장의 집무실을 두는 것이 좋겠다. 상징성도 있고 광주 원도심 회복의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질문을 종합한 내빈들은 시민들의 궁금증에 하나씩 답했다.

강 시장은 우선 세계개편 필요성과 정부의 20조 특별 교부금 배분에 대해 “시에서 구로 내리는 재정과, 전남에서 군으로 내리는 교부금 등에 대한 비율을 특별법에 담기로 추진 중”이라며 “특히 매년 받는 교부금 5조원을 어떤 형태로 지원하게 될지 크게 정

리가 되지 않은 상태”라고 답했다.

이 교육감은 교육자치 실현을 묻는 질문에 대해 “헌법에 명기된 내용처럼 교육자치는 교육 자주성과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 보장을 보장한다는 내용이 특별법에 들어있다. 시·도교육감과 지사, 시장의 4자협의문에도 명기한 만큼 특별법에 구체적인 내용만 담으면 된다”며 “공론화 과정에 대해 교육계 인사들의 의견을 얼마나 수렴했는지가 중요하다. 조만간 광주시와 전남도교육청이 학부모 대상 시도통합 관련 공청회를 열 방침”이라고 답했다.

통합청사 위치 제언에 대해서는 정 의원이 “논쟁이 불을만한 내용에 대한 논의를 뒤로 미루게 사실이다. 개별 사안에 대한 휘발성이 너무 높아지는 것”이라며 “내부적인 논쟁보다는 정부 지원을 더 늘려 받는 것이 현 단계다. 통합청사 위치는 법안에서도 명문화시킬 수 있지만 특례조항에 우선 집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뉴스1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1

“최소한의 삶 보장” 기본사회위원회 신설 대통령이 직접 위원장 맡아

모든 국민에게 최소한의 삶을 보장하기 위해 대통령 소속 자문위원회인 ‘기본사회위원회’가 신설된다.

행정안전부는 20일 국무회의에서 ‘기본사회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기본사회위원회는 모든 사람에게 최소한의 삶을 보장하고, 안정적인 생활과 다양한 기회를 누리게 하는 기본사회 실현을 위해 여러 부처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책들을 총괄·조정·지원하는 정책 컨트롤타워다.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로, 지난달 15일 입법예고 후 이날 확정됐다.

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위원회는 국민의 기본적인 삶을 국가와 사회가 함께 책임지는 기본사회 실현을 위해 국가 비전과 기본 방향을 설정하고, 법·제도를 개선한다.

특히 저출산·고령화, 인공지능(AI) 같이 국민의 기본적인 삶 보장 역시 국가의 핵심 의제라는 점을 분명히 하기 위해 대통령이 직접 위원장을 맡는다.

또 16개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 4대 협의체 대표자가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해 법정부 차원의 정책 역할을 결정한다.

위원회의 안건을 사전에 검토·조정하는 실무위원회도 설치한다. 중앙행정기관뿐만 아니라 지방정부, 학계, 일반 국민들도 위원회에 안건을 제안할 수 있도록 하면서 행안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도록 했다.

이 밖에 부처협의 및 입법예고 과정을 거쳐 당면직 위원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기획예산처 장관을 추가하면서 전체 위원수는 40명에서 43명으로 상향했다. ‘사무기구의 장’에 민간 전문가를 임명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행안부는 기본사회위원회가 차질 없이 출범할 수 있도록 오는 21일 김민재 차관 주재로 관계부처 회의를 열어 부처별로 추진하고 있는 기본사회 관련 정책을 논의하고, 정책 방향을 구체화할 예정이다.

윤호중 장관은 “기본사회위원회를 중심으로 행안부와 관계부처, 지방정부가 긴밀히 협력해 국민 한 분 한 분의 일상 속에서 체감할 수 있는 기본사회 정책을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뉴스1

광주·전남 민 선출직 평가 완료… ‘죽음의 계곡’ 하위 20%는?

기초단체장과 광역·기초의원 등 광주 83명·전남 289명 평가

기초총장 4·광역 15·기초 53명 컷오프 예상… 2월초 개별 통보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소속 광주·전남 선출직 단체장과 지방의원 평가가 완료되면서 ‘살생부’로도 불리는 하위 20%를 두고 출마 예정자들과 지역 정가가 바짝 긴장하고 있다.

20일 민주당 광주시장·전남도당에 따르면 시·도당 선출직공직자평가위원회는 이날 선출직 단체장과 지방의원 372명에 대한 현역평가를

마무리하고 평가 결과를 중앙당에 전달했다. 민주당 소속 광역단체장 5명에 대해서는 중앙당이 지난 6일 성과 PT와 면접 방식으로 직접 실시했다.

시·도당 평가 대상은 광주가 기초단체장 5명과 광역의원 21명, 기초의원 57명 등 모두 83명, 전남이 기초단체장 17명과 광역의원 56명, 기초의원 209명 등 총 289명이다. 광주 기초의원 2명

과 전남 기초의원 7명은 ‘불출마 서약서’를 제출해 평가 대상에서 제외됐다.

민주당 선출직 평가 기준에 따르면 광역·기초단체장은 도덕성 20%·리더십 20%·공약정책 평가 20%·직무활동 30%·자치분권활동 10%, 광역·기초의원은 도덕성 20%·공약이행평가 10%·의정활동 38%·지역활동 당무기여도 32%가 반영됐다.

단체장은 다면 평가와 PT·여론조사, 지방의원은 다면평가로 점수가 매겨졌다. 도덕성 평가와 동료 평가가 이전보다 강조되거나 새롭게 반영되는 등 변수도 적지 않았다.

관심사는 누가 ‘죽음의 계곡’에 빠졌느냐로, 사실상 살생부로 간주되는 하위 20% 포함 여부다.

20%를 역면 그대로 적용하면 73명이 하위

20%에 포함된다. 광역단체장은 1명, 기초단체장은 광주 1명, 전남 3명, 광역의원은 광주 최고 4명, 전남 11명, 기초의원은 광주 최고 11명, 전남 42명이 컷오프 위기에 놓일 것으로 보인다.

하위 20%는 공천관리위원회에서 2월초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20%에 포함되면 공천 심사와 경선 득표에서 각각 20%를 감점(페널티) 받게 돼 가산점이나 압도적 지지율을 보이지 않는 한 사실상 탈락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간주되고 있다.

정계 처분을 받은 경우는 ‘이중 페널티’로 한층 더 고달픈 협로가 예상된다.

지역 평가 관계자는 “하위 20%에 포함되면 공천 심사와 경선 과정에서 20%의 감점이 적용돼 이를 극복하고 경선에서 이기기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며 “공관위 통보가 이뤄지면 불출마 선언이나 1, 2위권 후보를 중심으로 이합집산이 더욱 활발해질 공산이 크다”고 말했다. /뉴스1

기사제보 TEL 062-525-9775

장어명가 청산 광주점 - 약품을 쓰지 않은 장어만 판매



Self 장어명가 청산

광주점

영광 법성포 청산양만 명품 장어



無항생제
無균
無소독제!

1일 18회 순환여과 및 미생물 배양 청정시스템으로 국내산 청정 명품장어

HACCP (위해요소관리우수) 해양수산부 인증번호: 제 AQ-0026

무항생제 (NON ANTIBIOTIC) 인증기관명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인증번호: 제15-18-0001호

전국 500여 양만장중 무항생제 지정업소 단 1곳
전국 500여 양만장중 HACCP 지정업소 단 3곳



예약문의 T. 062)233-9592

광주 동구 내남동 330-3(월남지구 호반2차 옆 슬바우주유소 옆)

저희 장어명가 청산 장어는 국내유일 무항생제 인증과 해썬(Haccp)으로 인증된 양어장에서 "무항생제, 무균, 무소독제"로 직접키운 명품장어입니다. 무항생제 장어 최고 품질! 장어명가 청산 광주점에서 모시겠습니다.